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 현황과 과제

글·**이명곤** leemg-bs@hanmail.net

국민의 힘으로 만든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설립은 오랜 기간 유족과 시민사회단체의 과거청산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국민의 호의적인 여론을 기반으로 지난 2004년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이 포괄적 과거사 정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여야의 법안 발의가 한 데 어울려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듬해 5월 3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5월 31일 법률 제7542호로 공포한 후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같은 해 11월 2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시행령도 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공포되어 진실화해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법에 근거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과거사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최초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 일 이후 4년 동안이나, 이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위원회 의결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2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기본법 제25조).

조사대상은 기본법 제 2조 규정에 의해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 등 위법 또는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 사건이다.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했다.

진실위원회의 활동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법에 따라 1년 동안(2005. 12. 1 ~ 2006. 11. 30) 진실규명 신청을 받아 총 10,860건을 접수한 후 조사국 배정 이후 검토와 재분류를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신청 접수 10,860건과 분리사건 38건, 사건 번호를 별도로 부여한 직권조사 6건을 포함한 처리대상 총 10,904건 중 9,271건(85.0%)에

“
진실화해위원회는 기본법에 근거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과거사의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활동 기간은 최초 진실규명 조사 개시 결정 일 이후 4년 동안이나, 이 기간 이내에 진실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위원회 의결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2년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기본법 제25조).
”

진실규명사건 처리 현황

단위 : 건(%)

진실규명 범위	계	조사개시결정 사건				각하 결정사건	사전 조사	보류 보완 검토중	취하	이송
		소계	진실 규명	불능	조사중					
총계	10,904 (100.0)	9,271 (85.0)	993 (9.1)	10 (0.1)	8,268 (75.8)	951 (8.7)	258 (2.4)	40 (0.4)	287 (2.6)	97 (0.9)
항일 독립운동	273	86	5	10	71	145	6	29	7	-
해외동포사	17	5	1	-	4	1	10	1	-	-
민간인 집단희생	7,775	7,537	903	-	6,634	-	-	-	234	4
적대세력 관련	1,634	1,517	52	-	1,465	93	-	1	22	1
인권침해	617	126	32	-	94	205	232	9	20	25
기타	588	-	-	-	-	507	10	-	4	67

대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으며, 이 중 993건(9.1%, 병합사건수 47건)에 대하여는 진실규명을, 10건에 대하여는 진실규명 불능을 결정하였다.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건은 장도원의 함흥만세운동 사건 등 항일독립운동 5건, 반탁운동가들의 소련 유형 사건 등 해외동포사 1건, 나주 동박굴재 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903건(병합사건수 15건), 양평 적대세력 사건 등 적대세력 관련 52건(병합사건수 4건), 민족일보 조용수 사건 등 인권침해 32건(병합사건수 22건) 등이다. 이 중 955건(병합사건수 40건)에 대하여는 결정문에 권고사항을 포함하였으며, 나머지 사건에 대한 권고사항은 위원회 활동 종료 후 발간되는 종합보고서에 포괄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성과와 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 1년차인 2006년에는 과거사 정리의 차질 없는 출발과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확산'을 기본 목표로 삼고 '진실규명의 체계적 전개' 등 4대 중점업무를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며, 지난해에는 '조사역량 강화와 진실규명 가속화'를 기본목표로 '목표치를 통한 조사 진척 상황 관리' 등 6대 중점업무를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위원장 이하 전 직원의 노력으로 지난 2년 동안의 활동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첫째, 설립 초기 국민적 인지도가 낮았음에도 대국민 홍보 활동에 주력하여 위원회 설립 이후 1년(2005. 12. 1 ~ 2006. 11. 30) 동안 10,860건의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하여 국민에게 위원회 활동을 알려 국민적 공감대와 이해를 높여왔다. 둘째, 예산과 전문 인력의 부족 등 많은 제약 속에서도 지난 2년여 동안 처리 대상 사건 10,904건 중 2,348건(21.5%)의 처리를 종료하였다. 또한 8,268건(75.8%)은 조사 개시결정이 되어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존속기간 내에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원 모두가 조사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셋째, 진실규명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두 차례 시행령 개정과 규칙·훈령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활동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인력 확보와 조직 개편을 통해 조사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 넷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의 피해자 및 목격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유해 발굴과 전국적인 피해자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진실규명에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고 화해 사업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섯째,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의 진실규명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하여 조사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와 중복조사 방지 그리고 관련 자료의 협조를 추진하여 조사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기관에서 생산하고 수집한 조사기록을 이관 받아 진실규명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섯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도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연 2회 회의를 개최하고 과거사 실무담당자 워크숍 등을 통하여 공동 업무 수행의 이해도를 높이는 등 협력 지원체제를 보다 더 강화하였다.

일곱째, 진실규명 결정 시 권고한 권고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해·위령 사업의 기초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진실규명 결정 사건에 포함된 권고 조치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하여 국무총리실 산하에 「권고사항 처리기획단」이 설치되고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먼저 위원회는 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위원회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존속 기간 내에 설립 목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관들의 조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존속 기간 내에 나머지 사건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진실규명 활동을 가속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까지 2,348건의 신청 사건을 처리하여 21.5% 정도의 성과를 내었지만, 이 중 진실규명 또는 불능 결정은 1,003건으로 9.2%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8,268건에 이르는 조사 개시결정 사건을 존속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는 남은 기간 동안 연도별 목표치를 정하고 이에 따라 조사 진척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매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기본법이 개정되어, 조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위원회 조사활동의 효율성과 화해의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들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들은 멀게는 구한말에서부터 가깝게

건국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사 정리 활동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왜곡된 진실을 밝혀 화해와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활동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정리 활동의 길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와 이해만 있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노력은 그것대로 최선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는 6공화국에 이르는 100년에 가까운 시간의 과거사(事)들이다. 그러다보니 사건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심지어는 신청서를 접수해 놓고 진실규명의 결과를 보지 못한 채 돌아가신 분들도 20명을 헤아린다. 또한 조사관들이 아무리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한다 해도 너무나 오래된 일이다 보니 당사자나 유족, 참고인들의 증언이 정확하지 못한 경우도 발생하고, 기록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탓인지 당시의 정황을 입증할 공문서나 자료를 발견해 내기도 하늘에 별따기인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때문에 진실화해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마무리해서 진실규명을 신청한 피해자, 희생자, 유족들의 한과 염원을 풀고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에 의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더 이상 국민이 희생당하는 사건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급한 강박감도 갖고 있다.

더구나 이런 진실규명 작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그나마 일부의 자료라도 남아 있고 얼마의 증언자라도 생존해 있는 상황이 과거사 정리 활동의 시급성을 촉구하고 있다.

건국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사 정리 활동은 결코 만만한 작업이 아니다. 왜곡된 진실을 밝혀 화해와 국민 통합을 이루려는 활동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거사 정리 활동의 길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와 이해만 있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진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진실화해위원회의 노력은 그것대로 최선을 다하고, 국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쏟아주시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목표 중 진실규명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화해와 국민통합이다. 우리 상황에 적합한 화해 모델을 개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평화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을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에 해당하는 사건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진실화해위원회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과거사 정리를 통하여 인권국가로 성장하는 계기와 토대를 마련하고, 과거사 정리의 국제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글 **이명곤** | 진실화해위원회 정책홍보팀장
사진제공 **진실화해위원회**